

2026년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(앵커) 추진방안 (요약) -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라이즈) 재구조화 -

< 그간의 성과 >

- (시·도별 거버넌스 구축) 17개 모든 지방정부가 대학지원 부서, 지역 센터(전담기관) 및 지역 위원회의 추진체계 완비
 - 지방정부와 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·산업계, 연구계, 지역혁신기관 등이 협력하며 지역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
- (시·도별 시그니처 과제 발굴)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·인력 구조, 현안 등을 고려해 대학 역량을 집중 투자할 시그니처 과제 추진
- (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촉진) 각 시·도는 RISE 국비 예산 대비 20% 이상을 의무 매칭하여, 약 3,600억 원의 지방비*가 고등교육에 투자
 - * 의무매칭 대상 국비(1조 5,383억 원) 대비 약 23% 매칭(최대 38% 매칭, 서울·전북)
- (지역인재 양성) 현장실습·캡스톤디자인 등 지역 학생을 현장형 인재로 양성하고, 성인학습자·재직자 교육으로 지역 정주인력의 역량 강화

< 참여대학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현황 조사·분석 연구결과('25.10. 기준) >

항목	이수 학생 수	항목	이수 학생 수
산업체 현장실습	13,660명	글로벌 역량 강화	23,857명
캡스톤디자인	103,874명	성인학습자·재직자 교육	100,196명
계약학과/정원제	6,128명	주문식 교육과정	23,197명
기타 취·창업 역량 강화 교육(비교과 프로그램 포함)			290,451명
합계		561,363명	

- (산학협력·기술혁신) 지역 내 대학-산업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, 산·학 공동 연구개발, 기술이전 등 지역기업 육성 지원

< 참여대학별 산학협력 주요 현황 조사·분석 연구결과('25.10. 기준) >

항목	건수·금액	항목	건수·금액
기술이전 계약	892건	산학 공동 연구과제 수	2,201건
기술이전 수입료	175억 원	산학 공동 연구비	2,008억 원
기술지도·자문·컨설팅	3,149건	연구장비 공동 활용	8,647건

□ 개선 필요사항

- **(‘인재육성’에 대한 고려 부족)** 1차년도(‘25년), 추진체계와 지원 전달 경로 등 정책기반 구축*에 집중함에 따라 공급자 중심 정책 운영 발생
 - * ▲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전략」 수립, ▲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(교육부훈령)」 제정, ▲사업비 집행 지침 마련, ▲사업비 교부·집행 등
- 2차년도(‘26년), 정책 콘텐츠 측면에서 정책 수요자인 ‘학생’, ‘인재’의 수요와 체감도 중심으로 체질 개선 필요
- **(재정 운용의 비효율성)**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‘나눠먹기’ 관찰
 - ※ 2,100만원, 5,100만원 등 소규모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사례 有
 - 소규모 과제로의 과도한 분절로 인해 규모있는 자원 집중 제약
 - ※ 17개 지방정부, 총 216개의 단위과제를 설계·운영 (시·도별 최소 5개 ~ 최대 17개)
 - 각종 사업비 집행 규제사항*으로 인해 지역·대학의 혁신 창출 제한
 - * ▲산학협력 기업에 적극적 재정지원 제한, ▲성과급·간접비 사업비 변경 제약 등
- **(행정경계 칸막이)** 당초 시·도 경계를 넘은 사업 추진을 독려*했으나, 17개 시·도 단위 사업 수행에 집중→ 초광역 단위 산학협력 등 제한
 - *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타 지역 대학·기업·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 권장(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전략」, ‘24.12.)

< 참고 : 초광역 단위 사업 사례 >

- ▶ **(서울시) 서울-지방 공유·협력 활성화 사업**(서울과기·아주·한밭·금오공대 컨소시엄 등)
 -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콘텐츠, 전문교수인력, 교육장비 등 자원을 지방과 공유
 - 지역 내 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크로디그리 개발 지원 등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
- ▶ **(광주시-대구시) AI·로봇 인증체계 전문가 양성 사업**(경북·계명·전남·호남·조선대 컨소시엄)
 - AI·로봇 인증체계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여,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

- 시·도 중심 사업에서 행정 경계가 칸막이로 작용해, 인재양성·산학협력 등이 실제 생활권, 산업·경제권과 괴리되는 현상

※ 예: 경북대(대구시), 경북 소재 기업과의 공동 인재양성·R&D 등 제한

□ 재구조화 방향

- **(정책 정체성 재정립)**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정책명 재정립

(前)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라이즈) ⇒ (後) **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**

- **(성과 강조)** 지역별 '25년 추진과정·성과를 엄정히 평가·환류(4,000억 원) → 대학에 대한 균등적 예산 분배와, 분절적·소규모 과제 중심 운영 타파
 - 17개 지방정부별 평가 결과 대외 공개를 통해 지방정부 성과 촉진
- **(인재 중심)** 성과평가를 계기로 지방정부별 대학지원 사업을 개편하여, 학생·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
 - ※ 지방정부가 재구조화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메뉴판 형태(현장실습 등)로 제시
- **(권역 중심 인재 육성)** RISE체계 재구조화로, 생활권 및 산업·경제권 단위 인재양성·산학협력을 확대해 '국토공간 대전환'을 뒷받침
 - **(5극3특 공유대학)**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5극3특 권역 단위 '공유대학'을 구축하여 거점국립대의 자원·역량을 he지역대학에 공유·확산 (1,200억 원)

< 주요 추진 과제 >

- ▶ **(공동 교육과정)** 지역 전략산업 분야 전공 과정을 기업과 함께 개발·운영하고, 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업 인증체계 등 도입으로 지역 학생의 취업을 뒷받침
- ▶ **(공동 연구)** 대학 교원과 석·박사생, 기업·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역 전략산업 분야 R&D·기술사업화 추진
- ▶ **(창업거점)** 거점대가 권역 내 학생·교원의 스타트업 인턴십, 사업화 자금·공간 등을 지원하여 he대학의 창업 지원역량 제고

- **(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)** 5극3특 성장엔진 분야 지방정부-기업-대학 협업 인재양성 모델 제안(bottom-up)→ 우수모델 선정·지원 (800억 원)

< 주요 추진 과제 >

- ▶ **(인재양성)** 기업 요구에 따라 국중·사립·전문대의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,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·정주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
- ▶ **(취업 지원)** 산업기반이 협소한 지역이 초광역 단위 계약학과 설치로 안정적 취업 지원
- ▶ **(기술이전)** 권역별 '연합형 기술지주회사' 활용, 성장엔진 분야 중대규모 기술이전 성과 창출

5극3특 공유대학 기본계획 [요약]

1 개요

- **(목표)** 5극3특 권역 단위로, 대학 간 교육·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는 ‘공유대학’ 구성→ 5극3특 발전을 뒷받침할 지역대학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
- **(지원규모)** 거점대(주관) - 국중·사립·전문대 공유대학 9개 모델
- **(지원기간)** 4년('26.~'29.)
- **(지원예산)** 9개 공유대학 대상 '26년 총 1,200억 원 지원
 - 5극3특 권역별 교원·학생 수 등에 따라 공유대학별 단가 기본배분(900억 원)
 - 교육부 ‘브랜드 단과대 육성’·‘AI 거점대학’ 지원대상 대학의 경우, 권역 내 他대학과 적극적 공유·협업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가배분(300억 원)

< 「지역 성장엔진 연계 인재양성 방안」 中 “'26년 재정지원방안” 발췌 >

- **(방향)** 성장엔진-AI 간 융복합 도모, 지역산업 AX 촉진 등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3개교 집중 패키지 지원 추진
- **(패키지 내용)** ① 브랜드 단과대 육성(총 1,200억원) + ② AI 거점대학(총 300억원) + ③ **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** (교당 200억원 내외, 앵커 중 5극3특 공유대학)

2 공유대학 구성·운영

- **(구성 방식)** 각 거점대(주관대학)가 소재한 5극3특 권역 내 대학으로 각 공유대학을 구성하되, 필요시 他 권역(수도권 등) 소재대학 포함 가능
 - 지방정부는 지방정부·거점국립대·참여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을 정하고, 지역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대학 최종 지정
 - ※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주관 공모·선정 절차를 통해 결정 가능
 - 5극 권역의 경우 공유대학 구성에 관한 지방정부 간 합의를 필수로 하며, 각 지방정부별 지역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대학 최종 지정
 - ※ 필요한 경우 복수 지방정부 간 공동 공모·선정 절차를 통해 결정 가능

- **(운영 방식)** 공유대학이 수행하는 복수의 과제(공동 교육과정 운영, 공동연구 수행 등)별로 참여하는 대학을 달리 설정 가능
- 대학 유형(일반·전문대/국립·사립대/교원양성대 등)을 고려한 트랙 등 세분화 권장
 - 5극 권역의 경우 거점대 소재 시·도의 지방정부·전담기관이 주관하여 관리하되, 관련 의사결정 시 상호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 운영
 - '27년 이후 초광역 과제를 전담 관리할 초광역 앵커 센터 운영 필요

3 추진 과제

- 각 지방정부별 기존 공유대학* 사업은 '5극3특 공유대학' 과제로 포함해 운영하고, 필요시 지방정부별 자율 관리 예산(국비 또는 지방비) 추가 활용
- * 예: (강원) LRS 공유대학, (충북) PRIDE 공유대학, (충남) DSC 공유대학 등
- 대학 간 협업을 통한 과제 추진을 위해 상설 협의기구 설치·운영 필수

< 추진 과제 개요 >

영역	방향	과제 내용
공통 과제	모든 공유대학의 추진 과제에 필수 포함	▶ (공동 교육과정) 지역 전략산업 분야 전공·융합과정 운영 (기업 공동개발·운영과정 필수 포함) ▶ (공동연구) 他대학 교원, 기업·출연연 연구원 등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 R&D·기술사업화 추진 ▶ (자원 공유) 대학 시설·장비·공간 등 공유·활용 플랫폼 구축하여 공동 교육과정·연구 추진 시 적극 활용
선택 과제	지역 교육·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 추가 기획	▶ (창업거점 역할 수행) 거점대가 권역 내 학생·교원의 스타트업 인턴십, 사업화 자금·공간 등 지원 ▶ (수도권·비수도권 연계) 반도체 등 첨단분야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교육과정·시설·장비 등 활용 ▶ (기초학문·교양교육 공유) 거점대 주관으로 기초 학문·교양 교육과정 개발 및 공유
성장 엔진 연계 과제	집중 패키지 지원교 주관 공유대학의 추진 과제에 필수 포함	▶ (특성화 융합연구원) 특성화 융합연구원 구성 시 他대학 소속 JA교원 운영 등 ▶ (지역 AX 생태계 조성) GPU 서버·실습실 등 AI 교육·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, AX 공동연구 등

4 추진절차

- ① **(계획 수립)** 지방정부는 거점국립대, 지역대학,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유대학 추진계획 수립 (추진계획 서식 추후 안내 예정)
 - 수립 과정에서 공유대학 구성을 구체화하고, 지방정부-대학 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함께 기획
 - ※ '성장엔진 연계과제'는 집중 패키지 지원교 선정 이후 추가 반영
- ② **(계획 제출)** 각 지방정부가 공유대학 추진계획을 제출하되, 5극 권역의 경우 거점국립대가 소재한 지방정부에서 대표로 제출
 - 1차 제출(~7월) 이후 교육부 협의·컨설팅을 거쳐 최종 제출(~8월)
 - 최종 제출 전 지역앵커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, 지방정부 앵커 기본계획에 공유대학 추진계획 반영
- ③ **(사업비 교부)** 지방정부-공유대학 간 협의를 거쳐 세부 교부방식 결정
 - ※ (방식①) 지방정부→전담기관(센터)→주관대학 또는 참여대학
 - (방식②) 지방정부→전담기관(센터)→주관대학→참여대학(재교부)
 - 각 지방정부는 공유대학 추진계획 상의 대학별 사업비를 대학의 소재 시·도와 무관하게 교부 가능

5 사업비 집행

- **(집행 지침)** 복수 시·도에 소재한 대학이 5극3특 공유대학을 구성한 경우, 사업비 집행에 관해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만 적용
- **(사업비 지원 대상)**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5극3특 공유대학(협의체)에 참여한 기업 등에 예산(국비·지방비) 지원 가능
 - ※ 단, 국비 지원은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개정 이후('26.下 예정) 가능
 - 단, 공유대학에 참여해 지원대상이 될 기업 등을 계획서 상 특정 필요
- **(사업비 변경)**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, 5극3특 공유대학 예산은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대상에 미포함

6 성과 관리

- ☐ (**자율성과지표 설정**) 각 지방정부는 대학 간 공유·협업 및 지역 교육·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 성과지표(정량) 및 목표치(연차별) 제시
- ☐ (**핵심성과지표 설정**) 교육부는 모든 지방정부 및 공유대학이 달성해야 할 핵심성과지표(정량) 설정 (별도 안내 예정)
- ☐ (**성과평가·환류**)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공유대학별 예산 차등 지원
 - 5극3특 공유대학 과제는 앵커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, 교육부 주관 별도 평가체계 운영 (연차점검, 중간·종합평가와 평가 시기 통일)
 - 지방정부 자율성과지표 및 교육부 핵심성과지표와 함께, 대학 간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공유·협업이 이뤄졌는지 등 종합 평가
- ☐ (**지방정부 자체 관리**) 지방정부(지역앵커센터)는 공유대학 성과 창출을 위해 참여대학의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과정 엄정 모니터링
 - 지방정부는 참여대학의 성과 창출 가능성이 저조하거나 부정·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, 거점대 협의 및 지역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등 결정

7 추진 일정(안)

- ☐ 5극3특 공유대학 추진계획 1차 제출: ~'26. 7월
- ☐ 5극3특 공유대학 추진계획 최종 제출: ~'26. 8월
 - ※ 1차 제출 이후 교육부 협의·컨설팅 등 진행
- ☐ 5극3특 공유대학 추진: '26.9월~
- ☐ 5극3특 공유대학 성과평가: '27. 下
 - ※ '27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중간평가와 평가시기 통일

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기본계획 [요약]

1 개요

- **(지원대상)** 초광역 단위 대학기업 협의회/ 대학은 국중대·사립대(일반 전문) 한정

< 지원대상 협의회 구성 >

- ❖ 협의회는 대학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되, 기관 유형별로 단일 또는 복수 가능
- ❖ 복수의 대학이 참여할 경우 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주관대학 설정 필요
- ❖ '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' 예산 지원의 대상은 거점대를 제외하나, 필요시 협의회에 거점대를 포함하되 시·도 자율 예산(국고·지방비)을 연계 활용해 지원
- ❖ 他시·도 소재 기업·연구소 지원 시, 모델 추진 과정에서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·도 소재 대학을 협의회에 포함 권장

- **(지원유형·규모)** ①5극3특 권역 단위(3개 내외), ②전국 단위(3개 내외)

- **(5극3특 권역 단위)** 5극 권역은 같은 권역 내, 3특 권역은 인접한 시·도의 기관 간 협의회 구성
- **(전국 단위)** 각 기관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단위에서 협의회 구성

- **(지원기간)** 4년('26.~'29.)

- **(지원)** '26년 총 800억 원

- 사업비는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미선정 모델은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자율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
< 평가등급별 지원금액(안) >

평가등급	S (2개)	A (2개)	B (2개)	미선정
지원	140~150억 원	120~140억 원	100~120억 원	컨설팅 지원

- ※ 등급 당 물량은 상기 '지원유형'별 1개 /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·유형별 물량·단가 변동 가능
- ※ 계획 수립 시 150억 원을 기준으로 수립→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기관 수 등 조정

- **(신청)** 복수 지방정부의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 추진 내용 상 협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 개별 지방정부 신청 예외적 허용

- ※ 행정통합 예정 지방정부의 신청은, 각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공동 신청으로 취급

2 추진 과제

□ 기본 방향

- 특정 산업 분야 설정 및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 등 과제 기획
 - 산업 분야의 종류·세분화* 정도에 제한은 없으나 분야를 설정한 취지·근거 등을 지역의 산업·경제적 여건 등 바탕으로 제시
- * 예: '모빌리티 분야로 설정 또는 '완성차제조/배터리/소재부품가공' 등 세부업종 단위로 설정
- 대학이 아닌 기업의 인재·기술 등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
- 추진 과제는 대학·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학생·인재의 교육·연구 및 취·창업 등으로 연결되도록 내용 구성

□ 과제 예시 ※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를 자유롭게 기획

- (인재양성) 성장엔진 분야에서 기업의 요구에 따라 국중대·사립대·전문대 등 특화된 역할 분담에 기반한 현장 인재 양성

< 참고 : 초광역 단위 인재양성 모델 사례 >

▶ (대구·광주·대전보건대) 초광역 단위 전문대학 연합 거버넌스 구축

- 보건대학별 강점 분야 중심으로 각 캠퍼스를 특성화 및 표준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, 보건 특화캠퍼스별로 산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

- 성장엔진 분야의 체계적 인재 육성을 위해, 고등학교 단계부터 취업·정주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

< 참고 : 단계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모델 예시 >

- ▶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-대학 협업체계 구축→ 고교-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 개설, 앵커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등→ 대학 진학 후 기업 채용연계 현장실습으로 발전

- (취업 지원) 지역 내 산업기반이 협소한 지역이 초광역 단위 기업-대학 연계를 통해 취업 연계 현장실습·인턴십 등 지원
- (창업 지원) 지역별 산재된 창업 자원을 교차 활용하여 학생·교원의 창업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창업 파이프라인 구축
- * 교육과정·실증인프라, 인적자원(교수진·VC 투자자), 재정자원(창업펀드) 등
- (기술사업화) 권역별 '연합형 기술지주회사'를 활용하여 성장엔진 분야의 중·대규모 기술이전·사업화 성과 창출

3 추진 절차

- ① **(계획 수립)** 지방정부는 산업 분야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(150억 원 기준)
 - 추진계획은 동 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수와 동일한 수 이내의 산업 분야에 관한 과제로 구성하고, 복수 과제의 패키지 형태로 수립
 - ※ 예: (단독 지방정부) 단일 산업 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
(3개 지방정부) 하나의 계획에서 최대 3개의 산업 분야에 대한 과제 기획 가능
 - 수립 과정에서 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 기관을 구체화하고, 지방정부-대학-기업 간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함께 기획
 - 각 지방정부는 최대 3개 이내의 계획에 참여 가능 (유형 무관)
 - ※ 최대 3개의 계획에 시·도지사 직인 첨부 가능(주관 지방정부인지의 여부와 무관)
 - ※ 행정통합 예정 지방정부는, 통합 전 기준 지방정부별로 3개 이내 계획에 참여 가능
- ② **(계획 제출)**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총괄할 주관 지방정부를 정하여, 주관 지방정부에서 대표로 계획 제출
 - 계획 제출 전 각 지역앵커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계획 확정 필요
- ③ **(평가·선정)** 교육부,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▲계획의 실현가능성, ▲대학-기업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, ▲추진 내용의 혁신성 등 평가 실시
 - 평가는 '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과 병행하여 운영
 - 평가결과 통보 시 추진계획에 대한 수정·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
- ④ **(지방정부 사업비 교부)** 평가결과 통보 이후, 지원대상 지방정부는 평가등급, 지원금 규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정해 보조금 교부 신청
 - 추진계획 상의 지방정부별 소요예산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사업비 교부
 - 지방비 매칭률 산정 시 지방정부별 교부 예산액을 모수(국비)에 포함

4 사업비 집행

- **(집행 지침)** 복수 시·도에 소재한 대학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사업비 집행에 관해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만 적용
- **(사업비 지원 대상)**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모델에 참여한 기업 등에 예산(국비·지방비) 지원 가능
※ 단, 국비 지원은 「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」 개정 이후('26.下 예정) 가능
- **(사업비 변경)**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도 불구하고,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비는 단위과제 간 예산 변경 대상에 미포함

5 성과관리

- **(자율성과지표 설정)** 각 지방정부는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 성과지표(정량) 및 목표치(연차별) 제시
※ 교육부는 평가결과 통보 시 자율성과지표·목표치의 변경·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
- **(성과평가·환류)**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협의체별 예산 차등 지원
 -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과제는 앵커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, 교육부 주관 별도 평가체계 운영 (연차점검, 중간·종합평가와 평가 시기 통일)
 - 지방정부 자율성과지표와 함께, 모델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충분한 소통·협업이 이루어졌는지 등 종합 평가
- **(지방정부 자체 관리)** 지방정부(지역앵커센터)는 대학-기업 협의체의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과정 엄정 모니터링
 - 지방정부는 협의체 참여기관의 성과 창출 가능성이 저조하거나 부정·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, 지역앵커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등 결정

6

추진일정(안)

- 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제출 안내: '26. 6월
- 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제출: ~ '26. 7월
- 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추진계획 평가·선정: ~ '26. 8월
- 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 추진: '26. 9월 ~